

-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와 연계하여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하는 등 심화되는 고령화에 대비한 환경 정비가 필요
- 정부는 세대간 및 세대내 격차를 발생시키는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
- 현행 연금제도는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, 고령자의 평균수명 연장, 사회보험수지 적자를 수급금액 삭감 및 보험료 인상이 아닌 적립금의 사용으로 충당하여 젊은 세대의 부담을 늘림.
  - 현행 연금제도는 피용자 세대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세대주의 보험료는 부양가족 유무에 상관 없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바,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단독·맞벌이 세대 피용자, 개인단위 국민연금·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음.
- 또한 정부는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국가 재정을 파탄시키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함.
-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나, 장기 금리가 상승할 경우 심각한 재정악화가 예상됨.
  - 물가 수준이 아베노믹스의 의도대로 2% 상승했을 경우 연금 지급액을 그대로 방치하면 수급자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상황에 빠지게 됨.

## V. 정책적 시사점

- 일본은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고령화 현상을 개념화하고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관련 법제·기구 등 인프라를 정비해 옴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고령화 대책은 아직도 충분히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역시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음.